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재외동포청 최적지</b> <b>인천뿐입니다</b>
		배포일자	2023년 3월 28일(화) 총 7매	
담당 부서	버스정책과	담당자	• 버스기획팀장 윤숙진 ☎440-3941 • 담당자 이대성 ☎440-3943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일 14시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원가 합리화하고 사업자 책임은 강화

-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개정안, 28일 시 의회 본회의 통과 -
- 표준운송원가 용역기간 단축(3년→2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의견 수렴도 -
- 운송질서 저해하는 부정행위 등 책임 구체화하는 ‘누적 벌점제 신설’ -

인천시와 버스운송조합이 2년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의 합의점을 찾은데 이어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재정지원금 지급의 합리성을 높이고,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매해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는 지난 2020년 9월 버스운송조합과 함께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3건의 제도개선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합리화하고 신중히 결정하도록 해 재정 건전성을 더욱 높이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시는 그동안 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전문가 용역을 통해 원가를 산정해 왔는데, 여객운송 환경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용역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원가 산정에도 신중을 더할 계획이다.

특히,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 및 운영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세분화하고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벌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벌점과 운영기준 위반행위 벌점을 합산해 누적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는 준공영제 퇴출까지도 고려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영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운송 사업자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시는 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 산정과 원가 항목별 특성에 맞는 정산기준 적용 등 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 및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도 합의해 마무리했다.

조영기 시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2년간 버스조합과 준공영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 합의 결과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대시민 서비스를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통합 청구·정산업무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하반기에 모든 준공영제 운송사업자에 적용할 예정이다.

- 붙임 1. 시내버스 준공영제 현황  
2. 신·구조문 대비표

**□ 배경**

-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시민의 교통 편의와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 도모

**□ 개요**

- 근 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등
- 시 기 : 2009. ~ 지속
- 참여현황 : 34개 운송사, 186개 노선 1,903대, 근로자 4,853명
- 사 업 비 : 2,000억원('23년 본예산)

**□ 주요연혁**

- '09. 2. : 인천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 '09. 7. : (사)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설립
- '09. 7. : 공동운수협정서 제정(시↔버스운송조합)
- '09. 8. :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
- '16.11. : 시내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 체결(시↔버스운송조합)
- '19. 3. : 시내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 개정
- '19. 9. :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 9. ~ '22.12. :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을 위한 협상 및 합의
- '22.12. : 시내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 개정
- '22.12. :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향후계획**

- '23. ~ : 시내버스 준공영제 합리적 운영방안 지속발굴 및 개선

**붙임2**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u>&lt;신 설&gt;</u>  1. ~ 9. (생략)	제9조(사업) ----- -----.  1. <u>표준운송원가 정산에 관한 사항</u> 2. ~ 10. (현행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제13조(표준운송원가의 산정) ① <u>시장은 3년 마다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u> <u>② ~ ③ (생략)</u>	제13조(표준운송원가의 산정) ① <u>시장은 2년 마다 전문 회계기관의 용역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u> <u>② ~ ③ (현행과 같음)</u>
제22조(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처리) <u>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유용하는 경우에는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부를 환수하고 성과이윤 지원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한다.</u>	제22조(부정행위 및 운영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u>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1. <u>부정행위 금액 및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회 재정지원금에서 차감</u> 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신 설>

<신 설>

<신 설>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  
과

3. 해당 행위를 적발한 날(시가  
적발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을 말한다)이 속한  
연도의 성과이윤 지급 제외

4. 부정행위 금액에 해당하는  
벌점 부과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준공영  
제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된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에는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지원금 중 일부를 차감하거  
나 해당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  
운송사업자에서 제외하여야 한  
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금 차감 기준과 준공영  
제 운송사업자 제외 기준은 시  
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준공영제 제외)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처분을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받는 등 준공영제 운영질서를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에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준공영제 운송사업자 제외로 인하여 해당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에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삭 제>